



민주화운동의 결정적 분수령과 함께한 민통련

이명식 민통련 전 조직국장

지난 1985년 3월 29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이 창립되었다. 80년 5월 이후부터 민통련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되돌아보고자 한다.

전두환 군부 쿠데타와 80년 5·18민중항쟁 이후 대부분의 운동은 극심한 탄압으로 인해 숨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83년에 접어들면서 민주화운동 세력은 차츰 새로운 모습으로 정비되기 시작했고 그것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1983년 9월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의 창립이었다. 민청련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면서 여러 부문과 지역에서 활발하게 조직건설 논의가 전개되었고 잇달아 운동단체들이 창립되기에 이르렀다.

1984년 3월에는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노협)이 창립되었고 뒤이어 민중문화운동협의회(민문협)도 창립되었다. 이렇게 부문운동 단체들이 연이어 창립되면서 1984년 하반기에는 운동단체들 간의 공동투쟁과 상시적 연대를 위한 모색이 시작되었다. 70년대 민주화운동과 80년 5월의 교훈을 바탕으로 민주화운동이 강고한 군부독재에 맞서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조직운동을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민청련 등의 조직에서 활동하던 사람들과 그때까지 조직운동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던 재야 선배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나타났다. 결국 1984년 가을,

민청련 등의 조직운동체들은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이란 연대체를 만들어 상시적 연대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고 곧바로 문익환, 계훈제, 백기완, 이창복, 장기표 등 재야 운동가들은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란 조직을 만들어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역과 부문을 포괄한 전선조직, 민통련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지자, 그 무렵 활발하게 조직건설을 모색하던 지역과 부문운동들로부터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민협과 국민회의의 양측의 인사들은 1984년 하반기부터 통합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게 되었다.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1985년 3월에 이르러 민민협과 국민회의는 민통련을 창립하기로 합의했다.

창립 당시 민통련은 고문으로 함석헌, 김재준, 지학순, 주교 등의 원로를 모셨고 의장에 문익환, 부의장에 계훈제, 김승훈 신부, 사무총장에 이창복, 사무차장에 장기표, 정책실장에 임채정, 민주통일위원장에 김승균, 민중생활위원장에 이부영 등 재야 선배와 중견 활동가들을 망라했다. 또한 지역과 부문운동단체가 가맹하여 지역과 부문을 포괄하는 전선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민통련은 ‘민주화와 통일을 민중의 힘으로’란 기치



- ▲ 1985년 3월 29일 민통련 창립대회
- ▶ 1986년 5·3 인천개헌현판식에서 독자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민통련

를 내걸고 군부독재의 폭압과 민주세력 분열공작에 맞서 민족민주세력을 하나로 묶기 위해 노력했다. 85년 창립과 더불어 광주학살 진상규명 투쟁, 구로지역 노동자동맹파업에 대한 지원 활동 그리고 학원안정법 제정 기도 저지 투쟁 등 실 새 없이 군부독재 정권과 싸우는 한편, 85년 총선에서 표출된 민중의 반군사독재 정치의식을 바탕으로 87년 권력교체국면을 앞두고 본격적인 범국민적 개헌투쟁을 벌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화와 통일을 민중의 힘으로

1986년에 접어들면서 개헌논의는 민주화운동 진영에서 정치권 야당으로, 국민 속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85년 총선에서 자신감을 얻은 신민당은 전국을 순회하며 개헌추진현판식(현판식)을 거행하기로 했고 이 현판식은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정국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민통련의 전국 조직은 광주에서 벌어진 3·30 대회를 기점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현판식에



적극 참여하여 별도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열기를 묶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과정에서 민통련 지역가맹단체의 많은 간부와 회원들이 구속·수배되는 아픔을 감수해야 했다. 그렇지만 민통련의 전 가맹단체는 개헌투쟁이야말로 전두환 정권과 겨뤄야 하는 물러설 수 없는 큰 싸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5·3 인천개헌현판식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5·3인천대회는 군사독재가 파놓은 함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평화적인 시위와 대규모 농성을 계획했던 민통련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경찰의 의도적 도발로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고 군부독재는 언론을 통해 그 책임 모두를 민통련에게 전가했다.

민통련은 5·3인천항쟁 이후 본부의 문익환 의장을



1986년 민통련 사무실 폐쇄 명령에 항의하는 농성

비슷한 대다수 간부 그리고 지역·부문의 가맹단체 간부까지 구속, 수배되는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민통련을 포함한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독재정권의 폭압과 인권유린에 항의하며 '고문·용공조작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펼쳐나갔다.

1986년 11월에 접어들자 전두환 정권은 학생운동을 일거에 잠재우기 위해 이른바 '건대사태'라 일컬어지는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 단일사건으로 1,000여 명의 학생을 구속한 '건대사태'는 전두환 정권이 87년 권력 교체기를 앞두고 최종적인 정치작업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어 민주화운동 단체의 구심 역할을 담당하던 민통련에 대해서도 사무실 폐쇄라는 언어도단의 조치를 감행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농성 중인 민주인사들을 끌어내고 사무실을 용접기로 막아버렸다.

이런 숨 막히는 공포 분위기는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살인사건'이 드러나 엄청난 국민적 분노가 표출되면서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1987년 2월 7일과 3월 3일,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규탄집회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권력의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고 말았다. 그러나 군부독재의 후퇴를 가져온 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준 것은 그들 스스로 감행한 4·13호헌조치였다.

4·13호헌조치의 발표는 민주화운동 세력 뿐 아니라 양식 있는 시민, 사회 모든 부문의 행동을 촉발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명실상부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국민운동본부 결성 논의가 무르익을 무렵에 터져 나온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의 진상은 온 국민을 다시 한번 분노에 떨게 했고 이것은 6·10항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통련은

전국의 지역조직과 부문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주도하고 6월항쟁의 전면에 나섰다. 6·10항쟁, 6·18 최루탄 추방대회, 6·26 평화대행진 등 6월항쟁 전 과정에서 민통련 가맹단체들은 각 지역에서 또 각 부문의 역량을 집결하며 국민적 항쟁을 이끌었다.

민통련과 87년 6월항쟁

1987년 노태우의 6·29선언 이후 국면은 다시 변했고 민통련은 6월항쟁을 통해 고양된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가기 위해 전국순회강연을 조직하는 한편, 87년 7·8월에 접어들면서 붓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한 노동자들의 대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동봉서주했다. 87년 9월이 되자 차츰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독재권력의 연장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의 후보단일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게 되었다.

여러 민주화운동 단체의 연합인 민통련에서도 이 문제는 치열하게 논의되었고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를 초청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 민통련은 가맹단체 전부가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 판단한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이

결정에 대해 조직 일부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고 결국 민통련은 대선국면에서 분열적 양태를 보이고 말았다. 87년 대선이 패배로 끝나자 민통련은 안팎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문익환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 민통련 인사들 중 일부는 88년 총선을 통해 제도권 정치영역으로 집단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통련의 민주화운동 전체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은 눈에 띄게 약화되었고 민통련을 대체할 새로운 연대운동 틀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89년 1월 민통련은 해소되었고 같은 날에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이 창립되었다.

87년 대선과 민통련의 분열

민통련은 85년에서 89년 초까지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역할을 하다가 역사로 넘겨진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있어 결정적 분수령이었고 그 과정에서 민통련의 역할은 대단히 크고 중요했다.

강고한 군부독재권력에 맞서기 위해 지역과 부문, 연령과 계층을 넘어 단일한 전선을 형성했던 조직 경험, 폭압적인 권력의 물리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대중투쟁을 펼쳤던 투쟁 경험 그리고 민중운동의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실천적 경험 등은 단순히 과거의 운동으로서만이 아니라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

아울러 민통련에 참여했던 많은 인사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서 - 정치, 행정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에 이르기까지 - 제 역할을 하고 있고 각자가 선 자리에서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통련 20주년에 즈음하여

지난 20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진전했고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렇지만 민중의 생활상의 문제는 지금도 심각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여전히 긴박하다. 민통련은 오래 전에 해소되었지만 민통련이 내걸었던 '민주화와 통일을 민중의 힘으로'란 기치는 지금도 포기할 수 없다.

이 달 7일에 20년 전, 민통련에 참여했던 동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고 서로 회포를 푸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금은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문익환 의장, 계훈제·김승훈 부의장을 비롯해 목이 메도록 그리운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 87년 7월 9일, 갓 출소한 문익환 민통련 의장이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에서 열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모습
▼ 전면에 나서 6월항쟁을 이끌었던 민통련

